

조합도 일정자격 갖추면 입찰가능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체수의계약이 올해 말로 전면 폐지되는데 따른 대체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개별 중소기업처럼 입찰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일정 자격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직접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제도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구매목표 비율제도,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제품의 지정효력을 3년으로 확대해 공사용 자재 구매시 공사설계와 실제구매 시기와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기업은행 갈수록 중소기업대출 외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57조2200억원으로 총대출액 대비 82.3%를 기록, 2003년말의 85.0%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계대출금은 8월말 기준 11조9200억원으로 17.1%를 기록, 2003년말의 14.5%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또 매년초 수립하는 목표대비 달성률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이 중소기업에 비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자금공급 계획대비 실적은 2003년 96.0%, 2004년 90.8%, 2005년 103.6%, 올 8월말 현재

65.4%인 데 비해 가계대출은 2003년 60.0%, 2004년 181.3%, 2005년 107.7%, 올 9월말 현재 82.2%였다.

전반적으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목표 달성률이 미진했던 데 비해 가계대출에서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중기대출 비중이 매년 약간씩 줄어 들고 있지만 설립취지에 맞춰 중기대출 비율을 70% 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은행권 내 지원실적도 가장 커 점유비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중기 지원 적극 나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기업 지원 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준공업지역 중 일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준공업지역 중 권역별 특성화 개발이 필요하거나 자치구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선 도로, 공용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산업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양대용 구청장이 관내 기업인 10명과 함께 12~17일 중남미 지역인 베네수엘라, 페루, 과테말라를 방문했다.

동반한 10개 업체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미흡한 유망 중소기업들로 구가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바이어 조사, 통역 등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영등포구는 지난달 11~21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3개국에서 7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시장개척 활동을 벌여 총 1146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기협력센터·기협기술금융, 업무협약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기협기술금융과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경련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은행권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 연구개발 협동조합 중심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높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개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R&D지원 정책설명회'에는 전국·지방조합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연구개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민경기 사무관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방향은 각 기업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라며 "단계별 연계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사무관은 이어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 협동형 지원 사업에는 △중소기업기술 연구회 지원 △기업 협동형 공동 기술개발 등이 있다"면서 "특히 기술연구회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등 업종별 단체와 중소기업이 구성한 연구회에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4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 75% '지방 이전 뜻 없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75.2%가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성조 의원(한나라·경북 구미갑)이 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연합회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176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지방이전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8곳(8.5%)에 불과했고 '없다' 124곳(75.2%), '검토중' 27곳(16.4%) 등이었다. 기업이 지방을 기피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인력채용 어려움(58곳, 21.1%)을 가장 많이 들었고 기존거래처와의 관계(47곳, 17.1%), 물류비 과다(39곳, 14.2%), 판로확보 어려움(29곳, 10.1%), 원부자재 조달불편(23곳,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 확대

신용보증기금(코딩)은 올해 보증연계투자 실적 이 10월말까지 지난해 투자금액 65억원(8개 업체)을 초과한 72억원(7개 업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코딩의 보증기업 중 혁신형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올해에는 100억 원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는 대출에 비해 장기간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며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는 정책

금융으로 직접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인 경영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투자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코딩은 현재 창투사의 투자가 단기·고수익을 목적으로 주로 IT업종에 치중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성장산업은 물론,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등 여러 업종의 업체들을 골고루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코딩은 보증연계투자의 장점이 중소기업들에 알려지면서 금년도 투자계획인 100억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기업의 요구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투자규모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액 급증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인수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매출채권보험계정 인수금액은 1조81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위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중소기업들이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이라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등의 채권을 보험에 가입한 뒤 문제가 생길 경우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80%까지 보상받는 제도이다.

중기 '클린사업' 1조8400억 효과

중소기업 작업장 시설 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클린사업이 재해를 20.6% 줄이고, 고용을 10.5% 높이며, 생산효과는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한 '클린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사업장은 산재발생률이 20.6% 감소하고, 고용인원도 11.75명에서 12.98명으로 평균 1.23명(10.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서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은 "생산성이 매우 증가하였다" 10.29%, "다소 증가하였다" 73.74%로 답해 클린사업장의 84.0%가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클린사업에는 2004~2005년 2년 동안 총 2900억원의 시설개선 비용이 투입된 반면 생산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1조8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투입비용대비 약 6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발생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 공유제 등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공유제는 부품과 공정 개선, 부품 국산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납품가 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분배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설비투자, 인력·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에 53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공유 우수업체의 포상을 확대하는 등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전자, 철강,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종별 성과공유모델 및 표준계약을 내년에는 조선, 기계, 유통, 건설, 공공부문 등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도 내년부터 공기업 등 참여기업과 업종을 확대해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포털사이트(www.winwin.go.kr)를 개설, 성과공유제의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 배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 절실하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렵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도 도입을 건의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김기현의원(한나라당)초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경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지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변명식 한국유통학회장, 박춘업 동국대학교수와 각 지역 소상공인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공제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정부의 4대 보험 적용확대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강화됐으나 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났을 때는 희생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배 위원장은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소상공인 공제제도도 도입은 이들 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유통점의 확산으로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재래시장의 전문화와 특화사업 전개 지원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고객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강화를 건의했다.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변명식교수는 “법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적은 비용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은행 설립과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경영통합 솔루션 ‘SAP비즈니스 원’ 공급확대

SAP코리아(대표 한의영)는 최근 중견 및 중소기업에 특화된 경영 통합관리 솔루션인 ‘SAP 비즈니스 원’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SAP에 따르면,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텔트 와이어리스 솔루션즈는 단가, 수입, E-BOM(설계변경)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수출현황, 재무제표 시스템이 부가된 비즈니스 원의 구축을 마쳤으며,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인 리치푸드는 웹 주문, 가맹점 관리 시스템 등을 추가한 SAP 비즈니스 원을 도입했다. 또, 식품 및 공업용 유화제 제조업체인 일신웰스가 공정, 품질, 설비, 원가, EIS(중역정보시스템) 시스템이 포함된 비즈니스 원 구축을 진행 중이다.

서버 및 스토리지 기업인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는 비즈니스 원과 ECO(Engineering Change Order)를 가동 중이며, 반도체 및 FPD 장비용 정밀 모션시스템 기업인 순환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다.

회사측은 다양한 산업군의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재무관리, 자금관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고객관계관리 등 핵심 프로세스들을 표준화 및 자동화하는 전문 솔루션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 공공구매정보망 내년 가동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을 내년 1월 가동할 계획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이 본

격화 되는 공공구매시장의 변화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처하고 판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공공구매정보망은 현재 2007년 1월 1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험운영 중에 있다. 정보망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롯, 신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주요공공기관의 입찰정보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인증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구매기관들의 구매실적 집계와 주요중소기업들에 대한 DB구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공공구매정보망은 10월중 실사용자만 월 2만건 이상의 접속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DB구축작업을 마치게 되면 성능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과 더불어 인증제품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구매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의, "가족친화경영 기업성과에 도움"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61.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38.8%의 1.5배에 달했다.

기업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중소기업이 59.8%, 대기업이 65.2%로 나타나 대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60% 이상이 '종업원 만족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올라간다'를 꼽았고 '이직률이 낮아져 안정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다'와 '기업이미지 개선을 통한 판매향상'이 뒤를 이었다.

어음제도, 효용성 논란

어음제도의 '활성화' 또는 '폐지'를 놓고 오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의 유명 이코노미스트이며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효용성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현승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고유한 어음제도가 고도화된 산업구조 채택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개발도상국이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

어서는 중소기업 등이 초기 운전자금 부족으로 여러 단계에 걸친 고도화된 생산기술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각 하청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할 '렌트(rent)'가 여러 단계에 걸쳐 쌓이게 되고 이는 최종재 생산 기업이 고도화된 생산기술을 채택할 유인을 축소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어음제도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고도 산업구조 채택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어음이 하도급 업체가 별도의 개입 자원 없이도 대기업 발행 어음의 할인율 통해 원자재 구입과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들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음의 만기 소지, 어음 할인시 배서 등을 통해 완화해 준다"고 그는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어음의 긍정적 역할은 경제에 외생적 충격이 있을 때에는 연쇄부도를 불러오는 등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민·중기 돕는 금융시스템 필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윤 위원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15주년 기념 초청강연을 통해 "아직도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가계나 기업들이 많다"며 "좋은 투자계획을 가진 기업이 투자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금융서비스로 소외된 가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 단계에서는 정책과 감독체계, 그리고 시장구조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이란 두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 두 원칙이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관치금융이니 하는 구습은 이미 과거 일이 되었지만 채권자 및 채무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제도적 애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금융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면서 "금융부문이 막힘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시경제 환경과 사회 인식, 법·제도적 사회 인프라의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